李, 부시 면담 놓고 범여-한 공방

〈명박〉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면담을 두고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한미 양국 외교라인에서는 면담 성사 과정에서 공식 라인이 배제됐다는 이유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때문에 부시 대통령이 결국 이 후보를 만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돌고 있다. 범여 정치권에서도 '부적절한 만남'이라며 이 후보를 공격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정치적 해석'을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이다. 부시 대통령과의 '면담'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경제외교를 위한 '방미'는 일정대로 추진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범여 "공사입찰식" 비난…공식 외교라인도 "불쾌"
한나라 "면담 상관없이 경제 외교 일정대로 추진"

◇이명박-부시 회동 '유동적'=잡음이 이는 것은 한미 외교 당국이 인지하지 못한 시점에 면담 사실이 공개됐기 때문. 외교통상부를 비롯해 미 국무부, 주한 미국 대사관 등 양국 정부의 공식 외교라인들이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의 핵심 측근은 1일 "그쪽(양국 정부)에서 비공식 채널을 통한 만남에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면담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이 없다. 성사 가능성도, 취소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부시 대통령과의 면담을 지속 추진하되, 가부에 관계없이 방미 일정은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정치적 목적의 방미가 아니라 경제외교를 위한 미국 방문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대선을 겨냥한 노림수라는 세간의 비판을 피하는 동시에 미국 방문의 의미가 평가절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박형준 대변인은 면담 취소설과 관련 "현재까지는 달라진 상황이 없다. 그럴 가능성이 없다"며 "이번 주말쯤 (부시 면담) 일정이나 형식 의제가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치권 비난=이런 가운데 범여권에선 이 후보에게 '뭇매'를 퍼부었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 로비를 통해서라도 공사 입찰만 따면 된다는 식의 건설회사 사장 방식으로 미국 대통령과의 면담을 추진했다는 인상을 받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이 후보와 부시 대통령 간 면담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고 정상외교는 현직 대통령의 몫"이라며 미국 정부에도 화살을 돌렸다. 그러면서 "부시 대통령과 미국 정부에게 재고를 요청한다. 이 후보 자신도 철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국현 전 유한킴벌리 사장도 "부시 대통령과 만나는 것 자체가 외교 결례이고 국가에 피해를 주는 일이다"며 "뒷거래하듯 미국을 방문하느냐"고 쏘아붙였다.

또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도 안 됐는데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미리 언론에 흘렸나"라고 비꼰 뒤 "(면담이) 실현된다면 국민감정이나 외교관례가 상식을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부시 회동은 구걸 방문"
신중식 의원 홈피서 비판

대통합 민주신당 신중식 의원(고흥·보성)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의 회동에 대해 '구걸 방문'이라고 비판, 눈길을 끌고 있다.

신 의원은 1일 자신의 홈 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한나라당 이 후보는 부시 미 대통령과의 회동 준비에 열을 올리기보다는 남북정상회담 앞둔 시점에서 청와대를 찾아 그의 대북정책과 통일방안을 설명했어야 했다"며 "이 후보가 대선 승리를 위해 국제적 외교관행이나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심도 고려하지 않고 미국 대통령을 만나 신고(?)하는 행태가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 시민단체 "미얀마 군정, 유혈진압 중단하라"

5·18기념재단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민주의 종각'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얀마 군정은 무력진압을 즉각 중단하고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광주 시민단체들은 5월 영령들의 염원을 담아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적극 지지할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계승하는 한국 정부가 미얀마 사태에 대한 국제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미얀마 승려들 "민주화 포기 않겠다"

군정, 양곤에 병력 증강 배치…시위 소강상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미얀마 민주화 시위에 대한 군정의 탄압이 강화되고 있지만 일부 승려들은 끝까지 반정부 시위를 계속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고위급 승려는 1일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와의 인터뷰에서 "한 달, 일 년 혹은 그 이상이 걸릴 지라도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우리는 무엇이든 볼 수 있으며 어디든 갈 수 있다. 일자리가 없고, 물가가 너무 올라 형편이 어려워졌음에도 국민들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고 있다"고 했다.

그또 "(시위를) 시도하기 전에 이미 그 위험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건 우리의 몫이다"며 "그 끝이 무엇이든 우리는 끝까지 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자신을 틴 쉐 마응(가명)이라고 밝힌 한 20대 승려는 지난 달 27일 자행된 군정의 쉐다곤탑(塔) 진압을 떠올리며 분개했다.

그는 "30여명의 승려들과 함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방패, 곤봉, 총검으로 무장한 200명 가량의 경찰이 들어와 우리 앞을 둘러싼 후 방패를 휘두르며 총부리를 겨눴다"고 회상했다.

한편 미얀마 최대도시 양곤과 제2도시 만달레이 등에 물결쳤던 민주화 시위의 거센 파도가 주말을 거치면서 눈에 띄게 잦아들었다.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양곤 시내에서만 10만명을 넘었던 시위대의 규모가 수천명으로 줄어든 것이다. 도도하게 시내 중심가를 휩쓸던 시위의 양상도 지난달 26일 미얀마 군정이 총과 곤봉을 앞세운 무력진압에 나선 이후 산발적 '게릴라 방식'으로 바뀌었다.

지난 주말 미얀마 군정은 양곤에 투입돼 있는 2개 사단 외에 1개 사단을 증강 배치해 시내 곳곳을 물샐틈없이 틀어막고 있다. 마치 민주세력의 마지막 숨통 조이기에 나선 분위기다.

미얀마 군정은 지난달 29일 국영매체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반정부 시위를 완전 진압했다고 발표했다. /정후식기자 who@·연합뉴스

미얀마 비밀경찰 극성…최소 1천300명 체포돼

미얀마 진압군의 무자비한 폭력 못지않게 군사정부 산하 비밀경찰이 극성을 부리면서 시위대 검거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미얀마 거주 한국교민과 여행업체 등에 따르면 가두시위가 시작된 이후 비밀경찰의 활동이 활발해졌으며 특히 진압군의 시위대 강제진압이 시작된 26일부터 밤마다 수십명씩 경찰에 체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얀마 시위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다 체포령이 내려져 태국으로 탈출한 정범래(41)씨도 "미얀마에는 50호 담당제와 100호 담당제 등으로 보안부대와 비밀경찰의 주민 감시체제가 잘 짜여있다"고 말했다.

최대 10만명이 양곤시내에 운집했던 민주화 시위가 급속히 시들해진 것도 진압군의 폭력 진압과 함께 비밀경찰의 검거 선풍이 일었기 때문으로 미얀마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미얀마 경찰은 유가인상으로 촉발된 가두시위가 지난달 17일부터 벌어지자 시위를 이끌던 민주단체인 '88세대 학생' 지도자 등 반체제 민주인사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령을 내린 바 있다.

한편 홍콩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인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이날 현재 승려 700명과 시민 500명 등 최소 1천300명이 군정당국에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변양균 '보광사 지원 외압' 시인

검찰 '횡령·알선료 떠넘기기' 신정아·박문순씨 소환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 씨 비호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서부지검은 1일 변 전 실장으로부터 '보광사 지원' 외압 행사 관련 혐의에 대한 일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변 전 실장을 이날 소환, 청와대에 파견된 김모 행정관을 통해 보광사에 특별교부금을 배정하라고 지시한 경위를 캐물었고 이 과정에서 변 전 실장으로부터 '보광사에 지원할 것이 혹시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변 전 실장은 그러나 보광사가 지정 문화재가 없어 특별교부세가 집행될 수 없다는 사실이나 지자체가 특별교부금을 다른 시설에 배정받은 뒤 자체 예산을 보광사에 지원하는 '돌려쓰기' 계획 등을 보고 받았는지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올해 행정자치부가 과천시 청소년수련원에 특별교부세 2억원을 배정한 사실이 확인된 점에 비춰 과천시가 이에 대한 대가로 보광사에 부속건물 신축 등 명목으로 3억8천만원의 자체 예산을 지원키로 한 것으로 보고 과천시 공무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당초 청와대 행정관이 보광사를 찍어서 지원해볼 수 없겠느냐고 건의해 살펴보니 보광사가 요건을 갖추지 않아 지원 계획은 무산됐다"며 "상급기관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과천시에 금액 내에서 요건이 맞는 다른 걸로 신청해보라고 했더니 청소년수련원을 들고 왔다"고 말했다.

검찰은 변 전 실장이 외압을 행사해 보광사에 대한 우회 지원을 강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울주군 흥덕이자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에 주목, 대가성 여부에 대한 법리검토와 함께 혐의 입증을 위한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윤재씨 수수 1억원외 또다른 돈 발견

검찰 대가성 여부 등 다각 조사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42·구속기소)씨와 정윤재(44) 전 청와대 비서관의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은 1일 정 전 비서관의 금융계좌에서 전세금으로 빌렸다는 1억원외에도 적지 않은 돈을 발견, 이 돈의 성격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정 전 비서관이 2005년 11월 지인으로 부터 받은 1억원 외에 성격이 불명확한 또 다른 자금이 나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정 전 비서관에게 1억원을 건넨 J모(48)씨를 불러 돈의 성격과 전달경위 등에 대해 다각적인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당시 국무총리 민정 비서관으로 있던 정 전 비서관이 받은 이 돈이 차용증 없이 전달된데다 그동안 대가성 여부에 대한 법리검토와 함께 혐의 입증을 위한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